



# 내년 상반기에 '항만인프라펀드' 조성키로

## 11개 부처 '중동지역 진출 종합대책' 확정발표



내년 상반기중 일반 개인투자자나 기업들이 항만시설 개발이나 운영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 펀드가 조성된다. 해외항만운영(개발)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또 중동지역 건설과 플랜트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1억~3억달러 규모의 해외건설펀드도 설립된다. 아울러 중동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카타르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의 대표 발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부처 공동 '중동지역 진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쿠웨이트에 이어 카타르와 사우디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국내기업이 법인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이들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쿠웨이트와의 기존 협정도 개정키로 했다.

또 1억달러 안팎의 규모로 해외건설펀드도 설립, 민간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건설과 플랜트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만공사와 하역사, 선사, 건설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항만 운영(개발)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간기업의 중동지역 항만 개발과 운영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해외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항

만인프라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항만인프라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사모나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국내외 주요 항만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SOC펀드나 선박펀드 등과 비슷하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시 원유의 우선구매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공동비축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쿠웨이트에 이어 사우디, UAE와도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산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중동진출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관부처별로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